

# 여야, 탄핵·예산안 대립... 30일 본회의 소집 대처

### 야 "이동관·검사 탄핵 처리"... 여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안돼"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투명... 끝없는 정쟁속 국회 한파 예고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의 소집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합의 없이 연이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할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합심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저지할 수단은 없다.

국민의힘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이 대응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지연을 내세운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의 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만의 결의된 여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김 의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는 등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며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 로 일관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총선필승 전진대회 및 총선거획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전당대회 대의원 권한 축소 논란

### 표 반영비율 20대 1 미만 변경 방침... 계파 갈등 재점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에서 전당대회 권리당원 대의원 표 반영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수면 아래에 있던 '대의원제 무

력화' 논란이 다시 불거져 고질적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차기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말인 만큼 지도부가 왜 현시점에서 당내 휘발성이 강한 문제를 굳이 건드렸는지 의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직 전대까지 시간도 많이 남는데다 그 사이에 총선도 있다.

그간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과 일부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 오른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미 한차례 '물 수장'이 이뤄졌다.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 반영 규칙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는데, 이는 대의원 표 비중을 줄여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표 가치를 키운 것이다.

이번 최고위 의결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계가 차기 지도부도 차지하기 위한 추가 포석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이번 의결안은 당헌 개정 사안인 만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이에 비명계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할 경우 당무위·중앙위에서 계파 간 충돌이 빚어지며 당헌 개정이 여의찮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무위는 27일, 중앙위는 12월 7일 각각 예정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준비 가속화"

### 외교장관 회의서 합의... 내년초 개최 유력

한중일 3국이 26일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장국인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1시간 40여분간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 장관은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은 지난 9월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간 합의는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상회의 개최에 더욱 속도를 붙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장관은 3국 정상회의의 상세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합의된 정상회담 개최 일시는 없다. 여러 일시안(案)을 갖고 소통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준비를 가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남은 시일이 촉박해 3국은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내년 총선 승리위해 민주당 단합해야"

### 이병훈 의원, 의정보고회

이병훈 국회의원(민주·광주 동남)이 26일 열린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참여 주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당내 '수박'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과 관련한 주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광주 동구문화센터, 전남 남구 방림초등학교에서 이틀간 의정 보고 토크콘서트를 열고 의정활동과 현재 정치 상황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대부분 현역 의원과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것과 달리 이 의원은 의정

보고회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친명(친이재명)이나 비명(비이재명)이나로 갈라치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견제하기 위해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당이 단결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4년간 매년 약 16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개발부지 매매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      |                          |
|------|--------------------------|
| 매매금액 | <b>720억</b>              |
| 대지면적 | <b>66,773㎡ (20,198평)</b> |
| 연면적  | <b>33,730㎡ (10,203평)</b> |
| 용도지역 | <b>일반공업지역</b>            |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